

이루다 사태 ‘규제강화’ 시발점?... 업계 “AI 위축 우려”

시민단체 vs AI 업계 ‘찬반논란’

개인정보보호위, 법적규제 필요
내달 중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AI업계, AI 시장에 강제성 우려
“이루다, 개별기업의 잘못일 뿐”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이루다’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수칙 마련에 나서고, 시민단체들이 자율적 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인공지능(AI)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관련 협회들은 AI 윤리 인증제도 등 시행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AI 기업들이 AI 윤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루다 사태가 관련 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큰 만큼 더 이상의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규제 강화 목소리에 AI 업계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AI 제품,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수

칙을 마련하겠다. 다음달 중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후 3월에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루다’ 사태와 같이 AI 등 신기술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개발 현장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등이 기획 단계부터 어떤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 등이 내놓았던 AI 윤리원칙이 추상적인 규정에 그쳐 실제 적용에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AI 업계에서는 아직 초기 시장인 AI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문화연대 주최로 지난 26일 개최된 ‘AI 챗봇 이루다가 던진 우리 사회의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인공지능에 어떻게 시민 윤리와 인권의 원칙을 장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AI 윤리 원칙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개인정보위 수칙이 발표되면 강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이루다 사태로 자율적 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지고 있어 규제 강화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개최된 ‘AI 챗봇 이루다가 던진 우리 사회의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시민의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AI 개발의 윤리나 원칙을 어겨도 전 문화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의무화할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AI의 사회적 오남용을 심화하고 감독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나 심의기구 마련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이루다 사태는 개별 기업의 잘못일 뿐 법 규정이 없어 생긴 문제가 아닌 만큼, 그 이상의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이루다 사태는 기존 법 체계에서 개별 기업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불법적인 일”이라며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뤄진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법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 규제가 바람직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등 AI 관련 협회들은 법이나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AI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올해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AI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올 하반기에 AI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협회는 지난 2018년 6월 발빠르게 AI 윤리규정을 내놓았다. 이 지표를 준수하면 데이터 수집, 개발 단계부터 이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윤리적인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도 “검인증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들이 이를 지키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인증 시스템 구축과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기업들이 이를 통해 AI 제품, 서비스 출시 전 안전성과 윤리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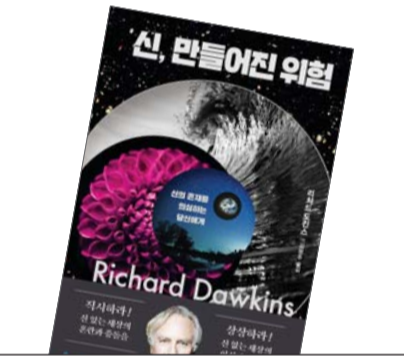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세상을 위한 12가지 해독제

도킨스가 신은 없고 비이성적 믿음만 남은 세상을 위한 12가지 해독제를 가지고 돌아왔다. 신도들은 성서가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성서의 모순, 부정확성, 표절, 부도덕한 가르침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헛된 믿음에 빠진 광신도들을 무신론자의 길로 안내한다.

저자는 “성서는 선한 책이고, 신은 자비로운 인물”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깨부순다. 그에 따르면 성서는 날조, 표절, 증거 불충분, 시대착오적 상상으로 넘쳐나는 잘 짜인 한편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

그의 말대로 ‘구약’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신은 복수를 중용하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다른 부족을 도륙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 쉬는 것을



신, 만들어진 위험

리처드 도킨스 지음/김명주 옮김/김영사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 헛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신명기 20장 16~17절에 적힌 성경 구절이다. 이제는 ‘만들어진 신’과 헤어질 때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364쪽, 1만6800원. /김현정 기자 hjk1@

시애틀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김태엽 지음/노란잠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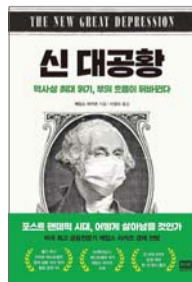


사람들은 ‘시애틀’ 하면 비와 안개, 스타벅스 1호점,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 자주 등장한 랜덤마크 스페이스 니들을 떠올린다. 시애틀은 풍요롭고 너그러운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풍족하게 받은 도시다. 덕분에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규제와 속박, 차별과 획일성에 단호하게 저항할 줄 알게 됐다. 시애틀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책.

240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신 대공황

제임스 리카즈 지음/이정미 옮김/알에이치코리아(AHK)



포스트 팬데믹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미 국방부 국제경제 자문위원인 저자는 2020년 이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을 뛰어넘는 ‘신 대공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추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2020년에 촉발한 신 대공황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 6000만개를 앗아갔다. 신 대공황 시대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담은 경제 전망서. 360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과기정통부, AI 윤리정립 실천방안 논의

내일 ‘AI 윤리정책 세미나’ 개최 의견수렴·균형적 정책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으로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인공지능 윤리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숙의·토론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성장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에 기반한 균형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인공지능 윤리 실천을 위한 주제별 발표세션과 학계·기업·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발표세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문정옥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의 주요 내용과 2021년 주요 추진과제’를, 서울교대 변순용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연계한 윤리교육의 방향과 도전 과제’를, 이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의 이현규 인공지능·데이터 PM이 ‘인공지능 기술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사람 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호영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별 인공지능 윤리 체크리스트 마련·윤리교육 등 인공지능 윤리 기준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방향과 인공지능 윤리 이슈 제기에 따른 각계 의견 및 정부 건의 등 토론이 진행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LG유플러스,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

세종시서 데이터 수집, 사업화 목표

LG유플러스가 자율주행 기술 시연, 실증 등에 이어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돼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향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

터’는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내에 오는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자율주행 실증차량의 운행·인프라·교통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바탕이다. 5G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관제센터에서는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에 투입하는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현황 관리 ▲실증 테스트 관리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 관리 ▲정밀지도 구축 및 관리 등 통

합 관제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LG유플러스는 세종시 내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 환경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실증구간을 60km 범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밀지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정밀 측위기술(RTK, Real Time Kinematic)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빅데이터 관제센터 내에는 ‘오픈랩’도 구축될 예정이다. ‘오픈랩’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오픈 API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한다. 보안도 강화한다. V2X 통신 인프라의 보안을 위한 보안인증 체계와 오픈랩에는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등 온·오프라인 보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lkni@